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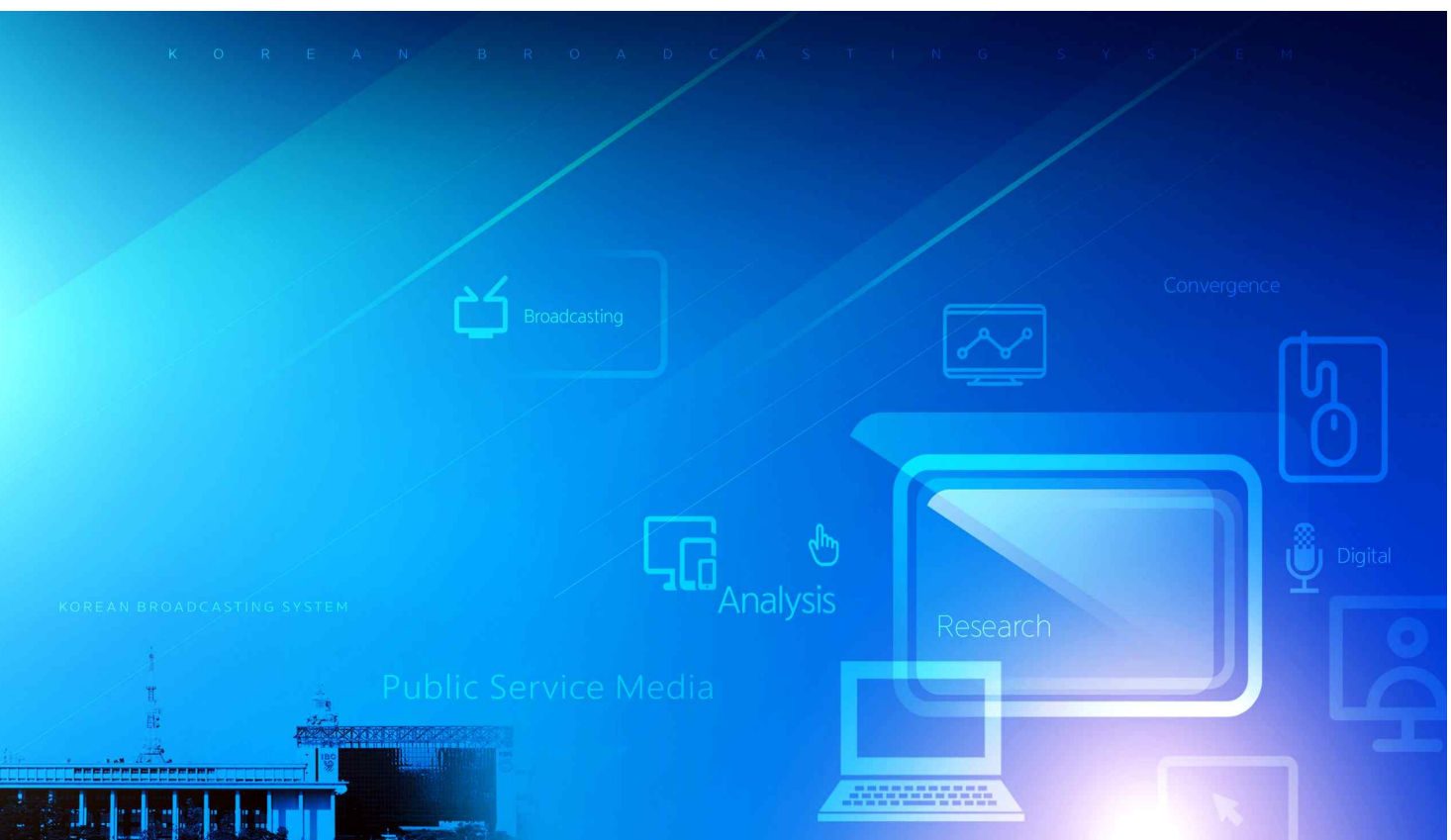


보고서

광복 80주년

2025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2025. 8. 8. | KBS 공영미디어연구부 조사팀



< 목 차 >

I. 조사 개요 1

1. 조사 개요 1

2. 응답자 특성 2

II. 주요 결과 및 의미 2

III. 주요 조사 결과 5

1. 북한에 대한 인식 5

1) 북한의 정권에 대한 호감도 5

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3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6

1)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7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

3) 통일 시기에 대한 전망 9

4)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9

5)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복수응답) 10

6) 통일에 도움이 되는 관련 국가 10

7) 통일세 부담에 대한 의견 11

8) 통일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1

3.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13

1)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13

2)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14

3) 북핵문제와 남북교류의 연계 14

4) 남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15

4.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16

1)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16

2) 전(前)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17

3)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7

4)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의견 17

5) 북한 개별관광 허용 정책에 대한 태도 19

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19
1)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	20
6.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 태도	21
7. KBS 통일·북한 보도의 중점 이슈에 대한 인식	22
III. 여론조사 결과 보도 가이드라인	24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조사 목적	북한 및 통일,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여 뉴스 제작 및 통일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결과 활용	KBS1TV <뉴스9> 방송 및 통일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방법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 기간	2025년 7월 30일(수) ~ 8월 1일(금)
표본추출 방법	주민등록통계(2025년 7월) 기준 성별, 연령대별 인구비례 할당에 따라 무작위 추출
표본 크기	유효표본 1,582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응답률	6.2%(총 25,401건 메일 발송)
조사 기관	KBS 공영미디어연구부

2.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582)	100.0
☒ 성별 ☒	남성	(786)	49.7
	여성	(796)	50.3
☒ 연령 ☒	19~29세	(228)	14.4
	30대	(241)	15.2
	40대	(277)	17.5
	50대	(314)	19.8
	60대 이상	(522)	33.0
☒ 지역 ☒	서울	(295)	18.6
	인천/경기/강원	(559)	35.3
	부산/울산/경남	(235)	14.9
	대구/경북	(152)	9.6
	대전/충청/세종	(170)	10.7
	광주/전라/제주	(171)	10.8
☒ 직업 ☒	화이트칼라	(695)	43.9
	블루칼라	(209)	13.2
	자영업	(66)	4.1
	학생	(60)	3.8
	전업주부	(225)	14.2
	농/임/어/축산업	(14)	0.9
	무직/퇴직/실업상태	(176)	11.1
	기타	(138)	8.7
☒ 가구소득 ☒	200만원 미만	(152)	9.6
	200만원~400만원 미만	(493)	31.1
	400만원~600만원 미만	(396)	25.0
	600만원~800만원 미만	(228)	14.4
	800만원 이상	(207)	13.1
	무응답	(107)	6.8
☒ 학력 ☒	고졸 이하	(275)	17.4
	대학 재학 이상	(1,307)	82.6
☒ 정치 성향 ☒	보수	(353)	22.3
	중도	(836)	52.8
	진보	(393)	24.8
☒ 이산가족북한출신 여부 ☒	있음	(142)	9.0
	없음	(1,440)	91.0

II. 주요 결과 및 의미

1. 북한에 대한 인식

-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 여전히 높음(81.6%) → 전년 대비 6.5%p 하락, 극단적 반감은 감소세(‘매우 반감’ 49.5%→ 전년 대비 10.5%p 하락).
- 북한은 적대/경계 대상이라는 응답이 77%로 대다수.

2. 통일에 대한 인식

- 통일 관심도: 67.2% (남성 73.1% > 여성 61.4%).
- 통일 필요성: ‘돼야 한다’ 65.6% 공감함, 하지만 최근 3년간 수치는 정체 상태.
(2023년 68.6% → 2024년 65.5% → 2025년 65.6%)
- 통일 시기 전망: ‘불가능하다’ 27.3%, ‘30년 이상 소요’ 21.3% → 장기화 인식 우세.
- 통일 과정에서 우려사항: ‘통일비용 부담’ 47.2% 최근 3년 연속 1순위.
(2023년 48.2% → 2024년 49.5% → 2025년 47.2%)
-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북핵 문제 해결’(39.8%), ‘군사 신뢰 구축’(36.8%) 우세.

3.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 북핵 해결 전망: 부정적 57.6% > 긍정적 42.4%, 실질적 진전 기대 낮음.
- 해결방안: ‘다자 협상’(24.6%) > ‘남북대화’(23.9%) > ‘제재’(23.8%) 순임.
- 남북교류 연계: ‘북핵 전 민간 교류만 허용’ 40.6%, 전면 교류는 소수.

4. 안보 및 대북정책 인식

- 안보 불안 인식: 64.5% (전년 대비 13.9%p ↓).
-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평가: 부정 67.0% > 긍정 33.0%.
- 이재명 정부 정책 우선순위: ‘비핵화 위한 외교’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긴장 완화 조치 찬성: 73.5%, 사회적 지지 확인됨.
- 북한 개별관광 찬성: 56.5%가 찬성 입장, 보수층 제외 모든 층에서 과반 이상 지지.

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 개최 필요성 동의: 74.3%, 다만 최근 3년간 감소 추세
(2023년 79.8% → 2024년 77.8% → 2025년 74.3%).

6. 탈북민에 대한 인식

- 민족 공동체 인식: 탈북민은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수용해야 한다’ 65.6%로 높음.
- 사회적 수용 인식: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잘 수용하고 있다’ 44.5%로 과반 미달.
- 이웃 공존 인식: ‘내 이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55.2%로 과반 이상.
- 문화적 위협 인식: ‘문화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20.4%에 그쳐 낮은 편임.

7. 통일비용 및 삶의 영향

- 통일세 부담 의향 감소: ‘개인 부담 수용’ 65.0% (최근 3년 연속 하락).
- 통일이 삶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기대 37.8% > 부정적 28.4% > 거의 영향 없다 24.2% 순임.

8. KBS 보도 우선 이슈

- 국민이 가장 중시하는 보도 주제: 북핵·안보 위협(35.3%), 통일비용·경제 현실 (35.1%)
→ 세대별로는 교류·공감대 형성 등 문화적 주제 선호도 병행

■ 종합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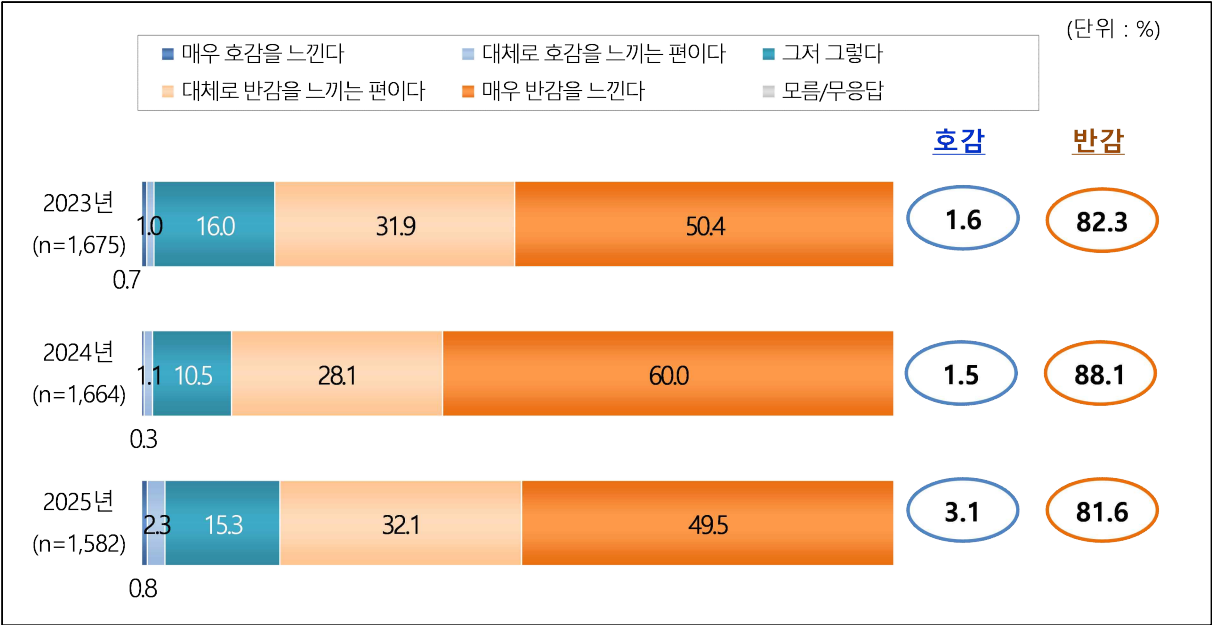
- 이번 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북핵 문제와 통일 비용 등 현실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뚜렷하게 나타남.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일 시기를 장기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비핵화 외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 긴장 완화 조치나 북한 개별관광 등 유연한 접근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 반면, 탈북민 수용에 있어 실제 사회적 수용 수준은 여전히 낮아, 제도적·문화적 통합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구됨.
- 정책적으로는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통일 비용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아울러 KBS는 안보·경제 중심의 보도 외에도 교류와 통합을 다루는 균형 잡힌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통일 담론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III. 주요 조사 결과

1. 북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정권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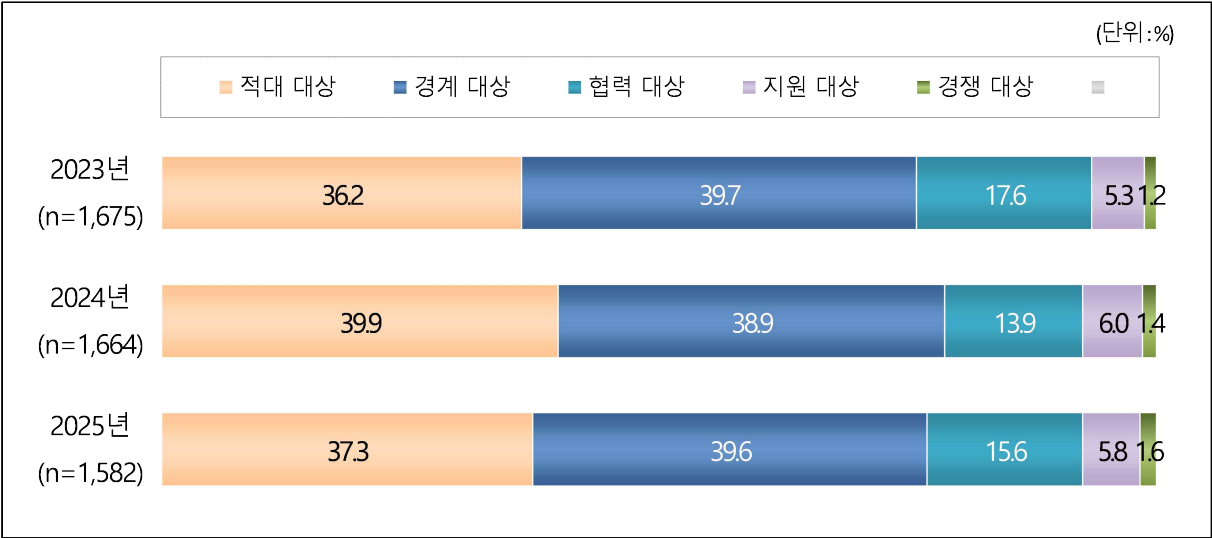
질문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81.6%임.
-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023년 82.3%, 2024년 88.1%로 증가하다가, 올해 2025년에는 81.6%로 감소함. 이는 전년 대비 6.5%p 하락한 수치로, 상승세를 보이던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된 것임.
- 특히,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023년 50.4% → 2024년 60.0%로 증가했다가, 2025년에는 49.5%로 10.5%p 감소함. 국민의 절반이 여전히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으나, 극단적 정서는 감소세를 보임.
-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의 반감 비율이 90.6%로 가장 높고, 진보층은 76.2%로 상대적으로 낮음.
- 전반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압도적이나, 극단적 반감 정서는 다소 완화되고 중립적·온건한 인식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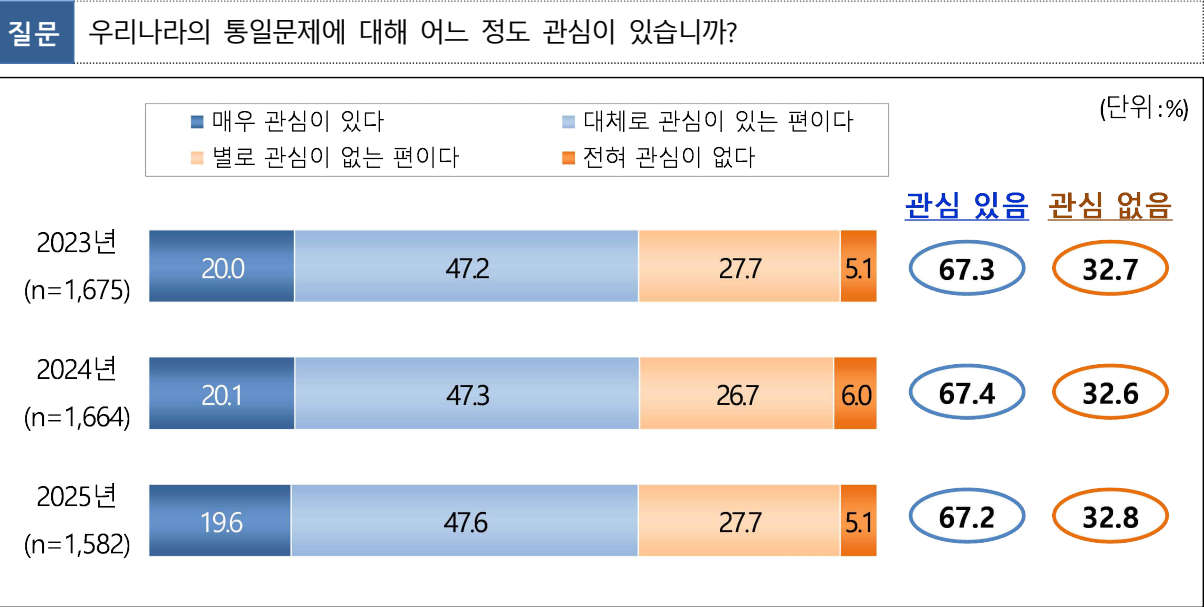
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질문 북한은 남한에게 어떤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은 37.3%, ‘경계 대상’은 39.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약 77%가 부정적 인식(적대·경계)을 보임.
- 한편,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은 15.6%, ‘지원 대상’은 5.8%, ‘경쟁 대상’은 1.6%로, 긍정적 또는 중립적 인식은 소수에 그침.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적대 대상’ 응답은 2023년 36.2%에서 2024년 39.9%로 3.7%p 증가했다가, 2025년에는 37.3%로 2.6%p 감소함.
- 전반적으로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제한적인 반면, 경계와 적대 인식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아, 신뢰보다 경계와 불신의 정서가 우세한 상황임.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1)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7.2%로, 응답자 2/3 이상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심 비율 67.2% = ‘매우 관심이 있다’ 19.6% +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다’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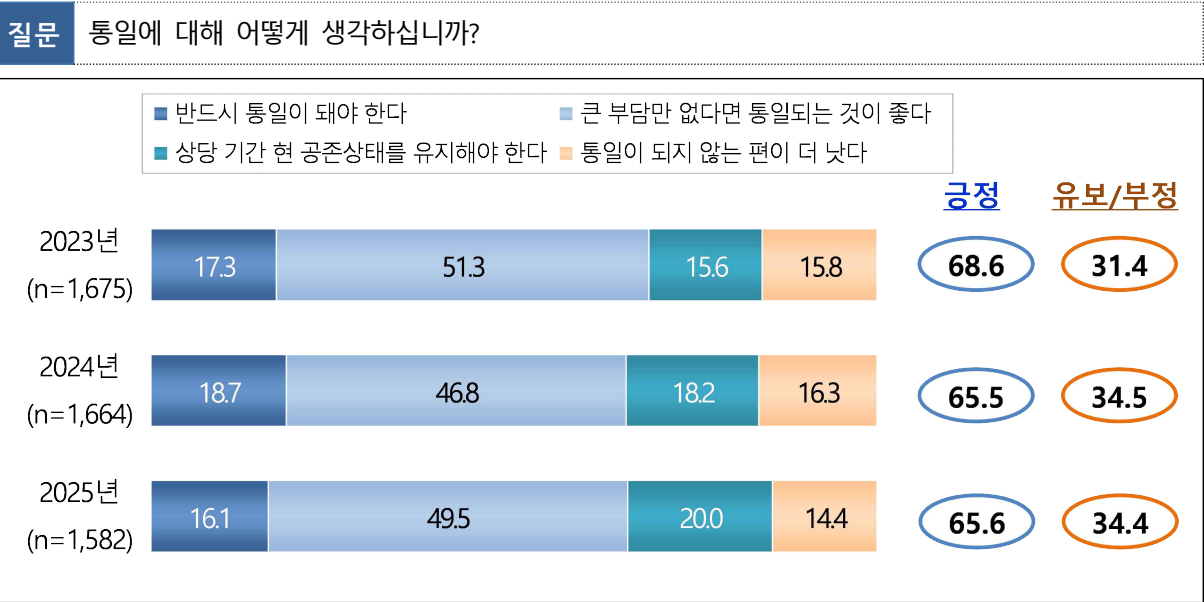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관심 비율은 73.1%로 여성(61.4%)보다 높고, 특히 ‘매우 관심’ 비율도 각각 26.3% vs. 12.9%로 두 배 이상 뚜렷한 차이를 보임.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71.1%)과 50대(6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반면, 30대(58.4%)가 가장 낮은 편.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관심도(77.4%)가 가장 높고, 중도층(64.1%)과 보수층(63.3%)보다 뚜렷하게 높음.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 3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67.3%) → 2024년(67.4%)→ 2025년(67.2%)

■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대체로 관심’이 다수를 차지해 깊이 있는 주의나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양상임. 이는 통일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적 의제로는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통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6%가 통일이 ‘돼야 한다’고 응답함(‘반드시 통일’ 16.1% + ‘부담 없으면 통일’ 49.5%). 이는 ‘현 공존 상태 유지’(20.0%)나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14.4%)라는 유보·부정 응답(34.4%)보다 높은 수준임.
- 응답자 특성별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반드시 통일’ +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의 긍정 인식 비율이 71.3%로, 여성(60.0%)보다 11.3%p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40대(69.0%)·50대(70.8%)에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대는 59.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 인식이 72.8%로, 보수층(59.6%)보다 13.2%p 높아, 정치 성향에 따라 통일 필요성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반드시 통일’ +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은 2025년 65.6%로 나타나, 전년(2024년 65.5%)과 유사하였으나, 2023년(68.6%)에 비해서는 3.0%p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은 여전히 우세하지만,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관심과 지지의 확산에는 한계가 나타남.

3) 통일 시기에 대한 전망

질문 통일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 통일 시기에 대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통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 이어 ‘30년 이후에 통일될 것’이라는 응답도 21.3%에 달해, 통일을 매우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는 비율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가 단기간 내 통일 실현은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21~30년 이내’(19.1%), ‘11~20년 이내’(18.7%)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중장기적인 통일 전망을 보인 응답도 적지 않음.
- 반면,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5%에 불과(5년 이내 3.1% + 6~10년 이내 10.4%)해, 단기적 통일 실현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전체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7%로, 실현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국민은 통일의 가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인식은 지난 3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2023년 71.3% → 2024년 70.9% → 2025년 72.7%).
- 대다수 국민은 통일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실현 시점에 대해서는 장기화되거나 불확실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

4)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질문 통일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47.2%)이 가장 많이 지목되었으며, 이어 ‘정치·군사적 혼란’(25.7%),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18.6%)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한 이주’(5.9%)와 ‘국제관계의 혼선’(2.7%)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음.
- 이러한 경향은 최근 3개년 동안 지속된 추세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응답률은

2023년 48.2%, 2024년 49.5%, 2025년 47.2%로 집계되어 매년 전체 응답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우려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러한 인식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 정치적·사회적 혼란보다 재정적 부담에 대한 민감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은 실질적 비용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5)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복수응답)

질문 통일을 위해 남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통일을 위한 ‘북한 핵문제 해결’(39.8%)을 가장 많이 응답함. 그 뒤를 이어 ‘군사적 신뢰 구축’(36.8%),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30.7%),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26.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남한 내부의 국론통일’(19.5%), ‘이산가족 왕래 및 고향 방문’(18.8%), ‘남북정상회담’(15.6%), ‘남한의 경제성장’(12.1%)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북한 핵문제 해결’은 2023년 41.1%, 2024년 37.6%, 2025년 39.8%로 매년 1순위를 유지하며 평균 39.5%의 응답률을 기록함.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2023년 11.3%에서 2025년 15.6%로 꾸준히 상승하여, 남북 간 정치적 소통 창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향후 정상회담이 통일 및 현안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로 안보 및 신뢰 구축(북핵 문제, 군사적 신뢰 등)을 가장 우선시하며, 경제 및 문화 교류를 그 다음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통일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뚜렷함을 보여줌.

6) 통일에 도움이 되는 관련 국가

질문 한반도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해 ‘없다’(57.6%)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 한편, 실제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전체 응답자의 30.3%가 미국을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응답함. 반면, 중국(9.2%), 러시아(2.0%), 일본(0.9%) 등은 한 자릿수 응답률에 그침.
- 특히 최근 3년간 ‘도움이 되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23년 54.9% → 2024년 56.4% → 2025년 57.6%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외교적 기대감의 저하와 지속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 강화를 시사함.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48.1%)보다 여성(67.0%)이 ‘도움이 되는 국가 없음’이라는 응답이 더 많음, 이는 외교적 기대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를 반영함. 특히 청년층은 ‘없다’는 응답이 각각 20대 65.9%, 30대 64.1%에 달해 타 연령층 대비 두드러짐.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미국(46.9%)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지하는 반면, 진보층은 ‘도움이 되는 국가 없음’(64.5%)이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높았음. 이는 한미동맹 및 외교 노선에 대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반영함.

7) 통일세 부담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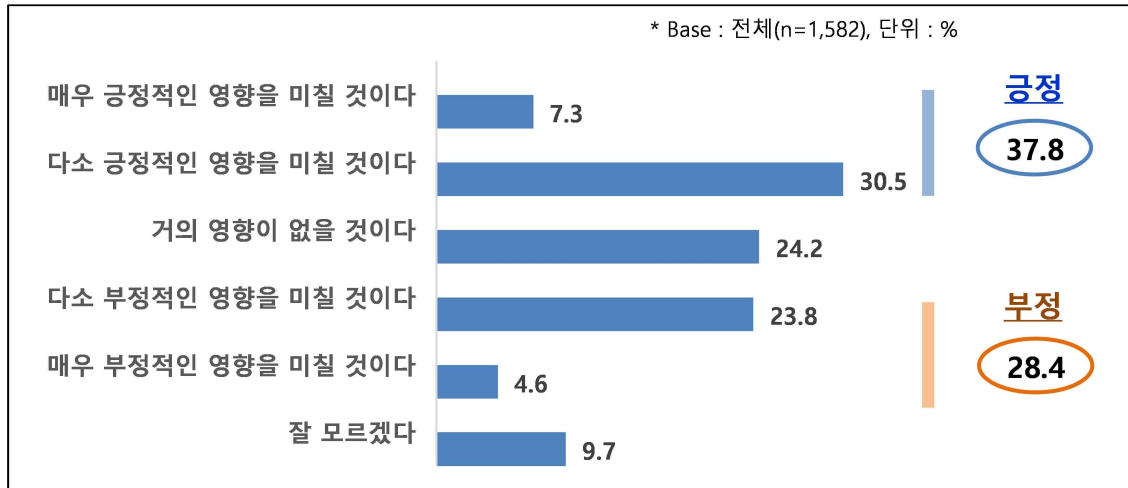
질문

만약 남북통일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 형식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연 소득의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세 부담 수준으로 연소득의 1% 미만을 선택한 응답이 27.4%로 가장 높았음. 이어 연소득의 1~5% 미만이 28.4%, 개인부담은 할 수 없다가 35.0%였음.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23년 68.5%에서 2024년 66.7%(↓1.8%p), 2025년에는 65.0%(↓1.7%p)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음. 이는 수치상으로 오차범위 내의 소폭 하락이지만, 통일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차 약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인식이 점점 민감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는 저율 부담(5% 미만)을 선호하며, 고율 부담 의향은 매우 낮고, 이러한 추세에는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 부담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8) 통일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질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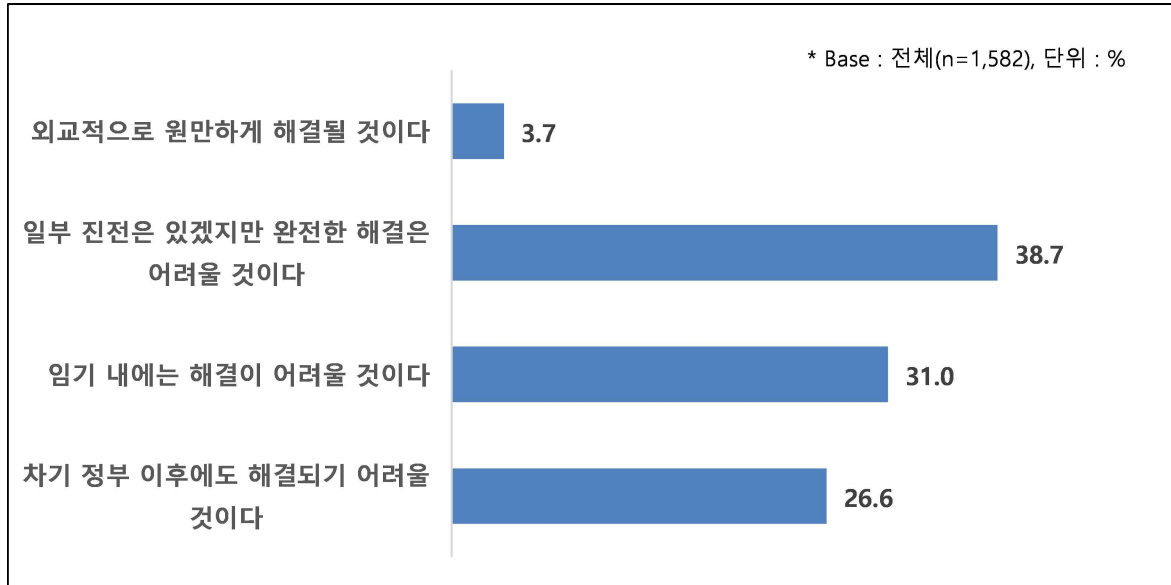
-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7.8%(매우 긍정 7.3% + 다소 긍정 30.5%)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28.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4.2%로 적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였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성별로 남성의 긍정 응답률은 49.4%로 여성(26.3%)보다 23.1%p 높았으며, 여성은 부정 응답(32.8%)이 긍정보다 높았음. 연령별로는 50대(44.0%), 60세 이상(40.5%) 등 중장년층의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30대는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나타남.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은 부정 응답이 36.7%로 긍정보다 높았음. 중도층은 긍정 32.7%, 부정 29.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통일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다소 우세하나,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아 통일의 실질적 효용에 대한 인식은 분명치 않은 상황임. 이는 통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 메시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줌.

3.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1)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질문

올해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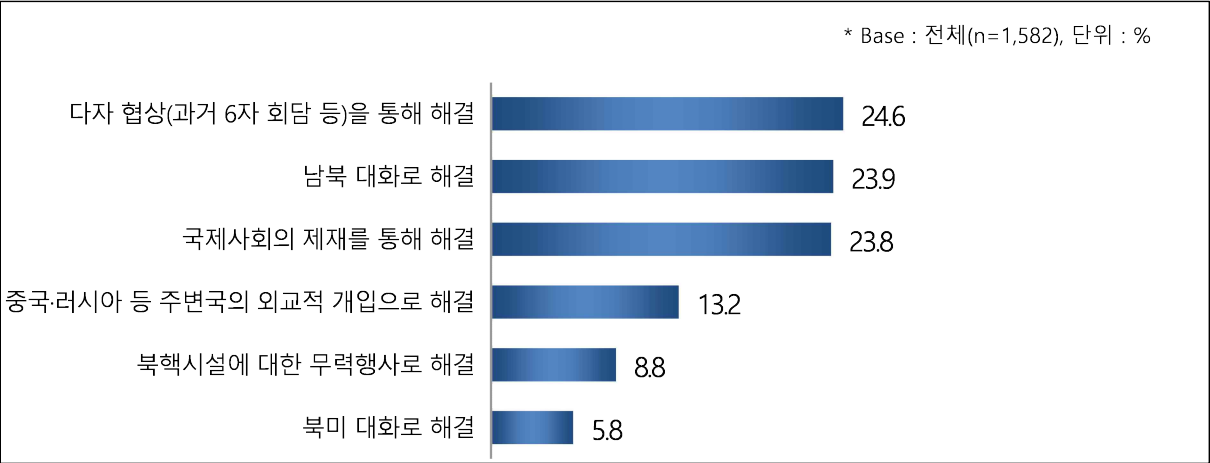
○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은 ‘일부 진전은 있겠지만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가 38.7%로 가장 높았음. 이어 ‘임기 내에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가 31.0%, ‘차기 정부 이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가 26.6%였음. 반면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는 3.7%에 불과하였음.

○ 즉,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57.6%(‘임기 내에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31.0% + ‘차기 정부 이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26.6%)로 긍정적인 전망 (42.4% =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3.7% + ‘일부 진전은 있겠지만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38.7%)보다 높았음.

■ 전반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단기간 내 해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부분적 진전 가능성은 인정하나 장기적 해결 지연을 예상하는 비관적 인식이 강함.

2)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질문 북핵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25년에는 보기 문항의 세부 표현이 일부 변경되어 [예: ‘6자 회담’ → ‘다자 협상(과거 6자 회담 등)’, ‘중국’ → ‘중국·러시아 등’]) 연도 간 비교 시 참고는 가능하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다자 협상(과거 6자 회담 등)’이 24.6%로 가장 높았으며, ‘남북 대화’(23.9%), ‘국제사회의 제재’(23.8%)가 뒤를 이었음.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외교적 개입’은 13.2%, ‘북핵시설에 대한 무력행사’는 8.8%, ‘북미 대화’는 5.8%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2025년 23.9%)는 의견은 2024년(35.4%)에 비해 크게(↓11.5%p) 줄었으며, 2023년(32.8%) 대비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3년(29.2%)에서 2024년(30.0%)으로 소폭(↑0.8%p) 늘었고, 2025년에는 23.8%로 전년 대비(↓6.2%p) 감소함. ‘다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3년(6자회담 20.8%)에서 2024년(6자회담 18.8%)으로 줄었으나, 2025년에는 24.6%로 전년 대비(↑5.8%p) 증가함.
- 전반적으로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는 협상·대화·제재 등 외교적·평화적 수단을 선호하며, 무력행사 선호는 소수에 그침. 그러나 남북 대화 선호는 최근 감소세를 보인 반면, 국제사회·다자 협상 선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시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한 평화적 접근이 여전히 중요함.

3) 북핵문제와 남북교류의 연계

질문

귀하는 향후 남북 교류(예: 경제 협력, 공동사업 등)가 북핵 문제 해결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핵문제와 남북교류의 연계에 대해 ‘북핵 해결 전에는 민간 차원의 교류만 추진해야 한다’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북핵 해결 전까지 어떤 교류도 추진해선 안 된다’가 33.4%, ‘북핵 해결과 관계없이 전면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가 26.0% 순으로 나타났다.
-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어떤 교류도 안 된다’(51.8%)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진보층은 ‘민간 차원의 교류’(45.0%)와 ‘전면적 교류’(40.8%)가 모두 높은 비율을 보여 개방적 입장이 두드러짐.
- 전반적으로 응답자 다수는 북핵 문제 해결 전에는 전면적 교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중에서도 민간 차원의 제한적 교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함.

4) 남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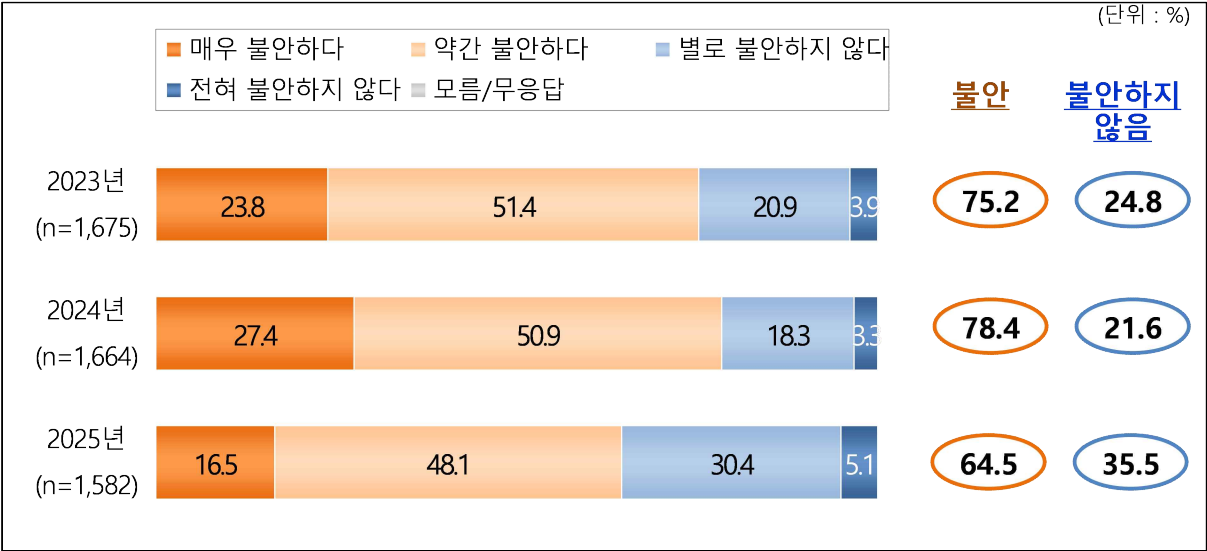
질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4%가 찬성(매우 찬성 28.1%+대체로 찬성 39.3%) 입장을 보여,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반대는 32.6%(대체로 반대 21.6%+매우 반대 11.0%)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찬성 비율이 71.1%로 여성(63.7%)보다 7.4%p 높았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이 78.9%로 가장 높았고,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중도 70.1%, 진보 50.2% 순이었고, 진보층은 찬반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4.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1)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질문 귀하께서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64.5%가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16.5%+약간 불안하다 48.1%)고 응답하였으며, ‘불안하지 않다’(별로 불안하지 않다 30.4%+전혀 불안하지 않다 5.1%)는 35.5%였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안함 비율은 20대(68.8%)와 60세 이상(68.8%)에서 가장 높았으며, 40대(57.1%)에서 가장 낮았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68.9%)가 대학 재학 이상(63.6%)보다 불안함 비율이 높았으며,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79.0%)에서 가장 높고 진보(50.8%)에서 가장 낮았음.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불안하다’ 응답 비율은 2023년 75.2%, 2024년 78.4%로 상승(↑3.2%p)했으나, 2025년에는 64.5%로 크게 하락함(↓13.9%p).

■ 전반적으로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불안함이 우세하지만, 2025년 들어 불안함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이 증가함. 이는 국제정세 변화, 남북관계 완화 가능성, 국내 정치·사회 분위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2) 전(前)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0%는 반대(대체로 반대 24.8%+적극 반대 42.1%) 입장을 보였으며, 33.0%가 찬성(적극 찬성 7.6%+대체로 찬성 25.5%) 입장을 나타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 비율이 37.4%로 여성(28.7%)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4.5%로 가장 높고 40대에서 20.9%로 가장 낮았음.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8%), 부산/울산/경남(41.6%)에서 찬성이 높았고, 광주/전라/제주(17.9%)에서 가장 낮았음.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이 69.8%인 반면, 진보층은 94.9%가 반대하여 뚜렷한 인식 차이가 드러남.
- 전반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진보층에서 강한 반대가 두드러짐. 반면 보수층과 대구/경북, 60세 이상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아 정치 성향·지역·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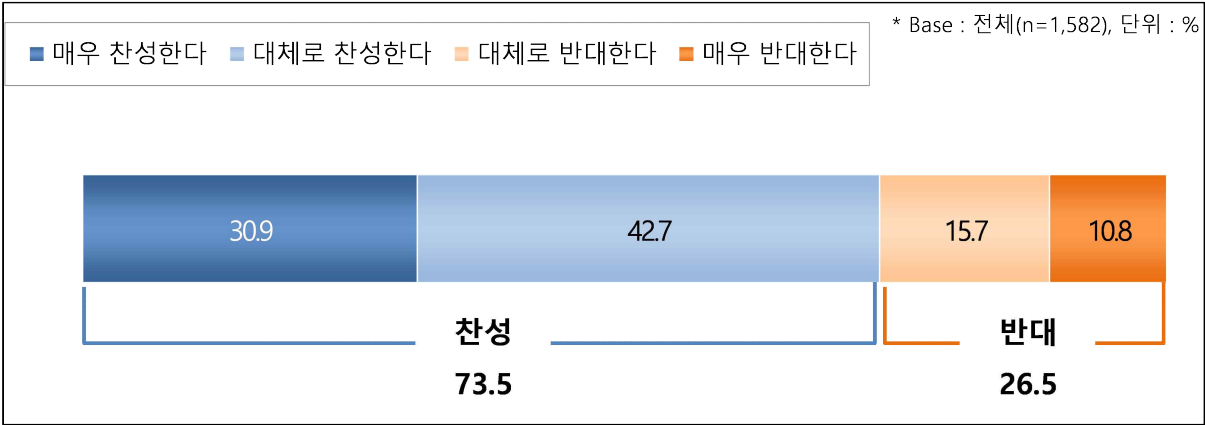
3)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질문 현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49.0%)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응답함. 그다음으로는 ‘경제 교류·협력’(22.4%), ‘문화·예술·체육 등 비정치적 교류’(15.6%), ‘이산가족 상봉’(10.1%),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2.9%) 순이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47.8%)과 여성(50.1%) 모두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61.3%)와 20대(53.8%)에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비중이 가장 높았음.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62.3%)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장 높았고, 진보층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35.6%)과 ‘경제 교류·협력’(36.5%)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 차별성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며, 이는 대북정책이 안보 중심 기조를 유지하되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인도적 협력을 병행하는 균형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함.

4)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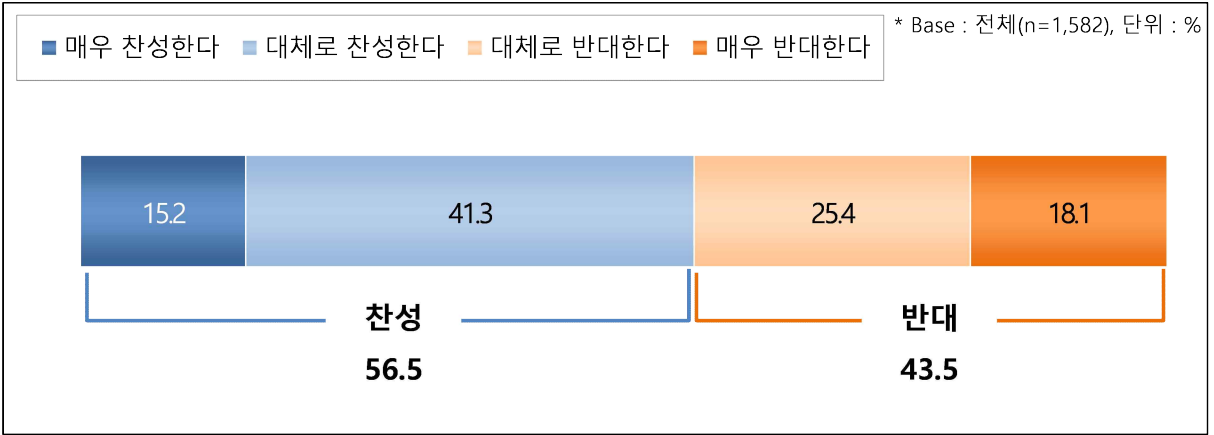
질문 최근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구 등 대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구 등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5%(매우 찬성 30.9%+대체로 찬성 42.7%)로 ‘반대한다’(26.5%)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이는 국민 10명 중 약 7명 이상이 해당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의 찬성 비율이 78.0%로 남성(69.0%)보다 9.0%p 높았음. 연령별로는 50대(82.5%)와 40대(79.4%)에서 찬성이 높았음.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80.7%)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66.6%)과 부산·울산·경남(67.1%)에서는 다소 낮았음.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찬성이 93.6%로 절대적으로 높았고, 중도층 74.8%, 보수층 48.3% 순이었음.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과반(51.7%)을 차지함.
-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는 현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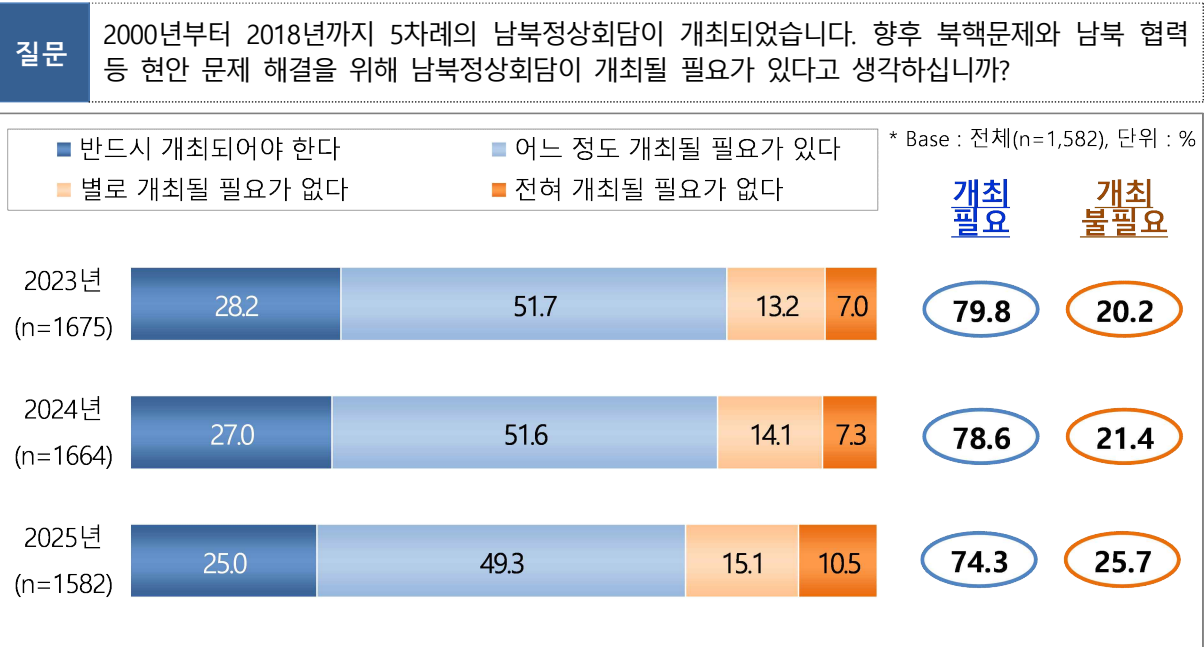
5) 북한 개별관광 허용 정책에 대한 태도

질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북한 개별관광(개인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개인관광) 허용 검토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6.5%(매우 찬성 15.2%+대체로 찬성 41.3%)로 ‘반대’ 43.5%보다 ↑13.0%p 높게 나타남. 국민 절반 이상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7.1%)과 남성(55.8%) 모두 찬성이 비슷한 비율로 높았음.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찬성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음.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에서 찬성이 71.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52.2%로 가장 낮았음.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찬성이 79.7%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은 53.4%로 과반이었으나, 보수층은 찬성 38.0%, 반대 62.0%로 반대가 우세했음.
- 전반적으로 북한 개별관광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이 우세하나, 반대 의견도 40%를 넘어 사회적 합의 수준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정책 추진 시 안전 문제, 국제 정세, 남북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1)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



- 남북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74.3% =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25.0% + ‘어느 정도 개최될 필요가 있다’ 49.3%)는 응답이 ‘개최될 필요가 없다’(25.7% = ‘별로 개최될 필요가 없다’ 15.1% + ‘전혀 개최될 필요가 없다’ 10.5%)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025년 74.3%로 2024년 (78.6%) 대비 ↓4.3%p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 2023년 : 79.8% → 2024년 : 78.6%(↓1.2%p) → 2025년 : 74.3%(↓4.3%p)
-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동의하며, 전체 찬성 비율이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여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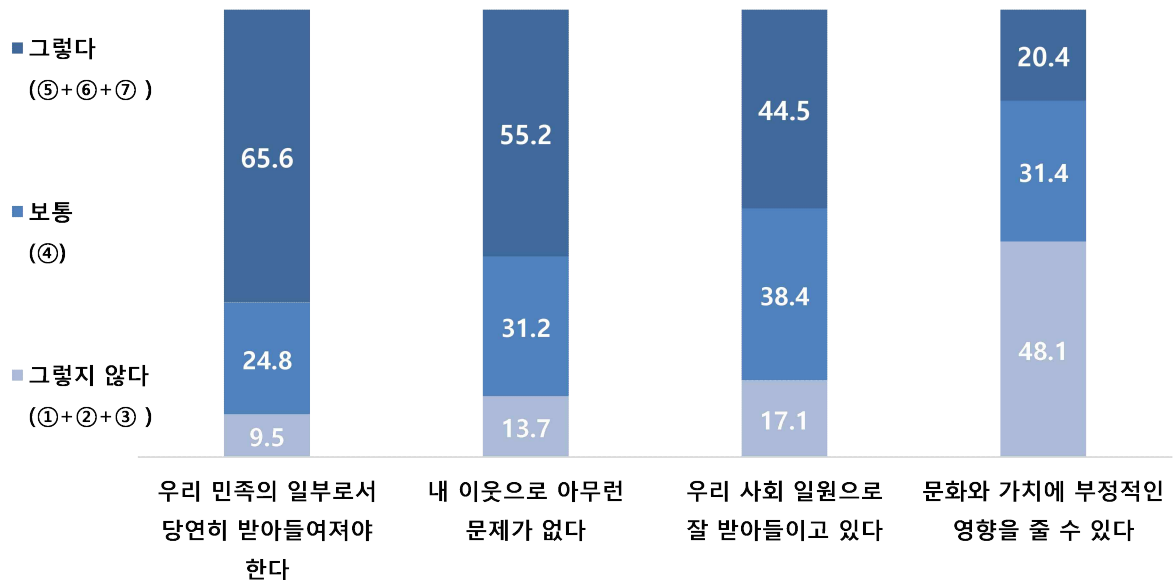
6.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 태도

질문

다음은 탈북민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직접적인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민과 함께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고, 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아래의 척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 Q1. 우리 사회는 탈북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다
Q2. 탈북민이 내 이웃으로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Q3. 탈북민이 대한민국 문화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Q4. 탈북민은 우리 민족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 Base : 전체(n=1,582), 단위 : 7점척도 %



○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4개 문항(7점 척도)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민이 우리 민족의 일부분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민족 공동체)’는 문항에 대한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⑤,⑥,⑦ 합산)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다음으로 ‘탈북민이 내 이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역사회 공존)’는 응답 항목에서는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55.2%로, 과반수가 탈북민과의 공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다(사회적 수용)’는 문항에서는 ‘그렇다’가 4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 실제 사회적 수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 ‘탈북민이 문화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문화적 영향)’는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①,②,③ 합산)는 응답이 48.1%로, ‘그렇다’(20.4%, ⑤,⑥,⑦ 합산)보다 27.7%p 높게 나타나, 탈북민에 대한 문화적 위협 인식은 낮은 편임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는 탈북민을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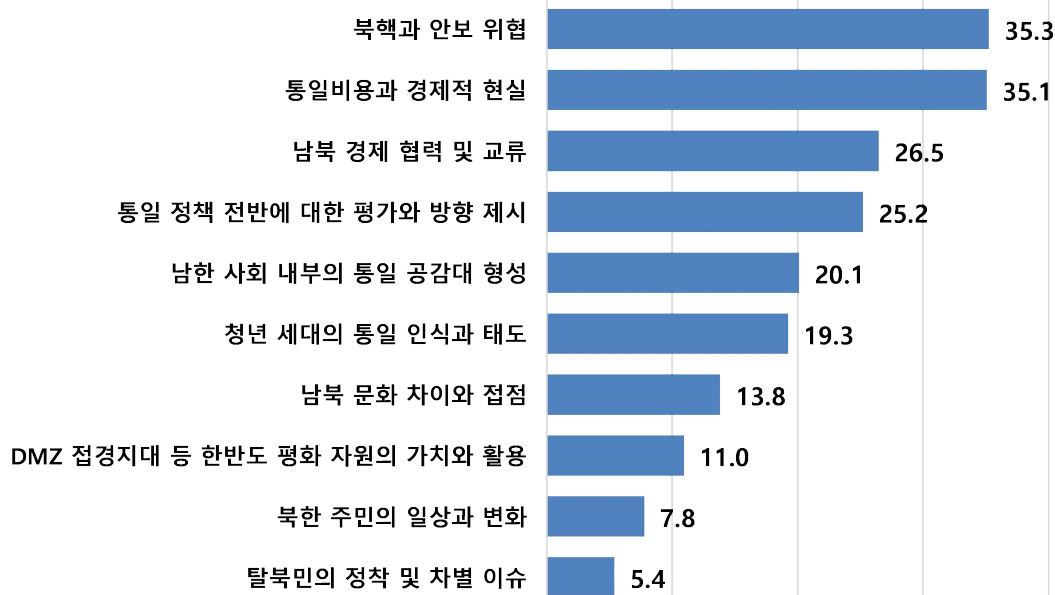
내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사회적 수용 수준은 전반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문화적 통합 과정에서 여전히 인식의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함. 또한 탈북민이 문화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은 소수에 그쳤으나, 약 20%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계층이나 집단 내에 부정적 고정관념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7. KBS 통일·북한 보도의 중점 이슈에 대한 인식

질문

앞으로 KBS가 통일 및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이슈나 주제를 2개까지 골라주세요.

* Base : 전체(n=1,582), 단위 : 복수응답 %



- 향후 KBS가 통일 및 북한 관련 보도에서 집중해야 할 이슈, 주제로 ‘북핵과 안보 위협’(35.3%)과 ‘통일비용과 경제적 현실’(35.1%)을 주로 응답함. 다음으로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26.5%), ‘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시’(25.2%), ‘남한 사회 내부의 통일 공감대 형성’(20.1%)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북핵과 안보 위협’(36.4%), 여성은 ‘통일 비용과 경제적 현실’(37.2%) 응답이 가장 높았음. 연령별로는 20대(43.9%)와 30대(37.9%)에서 ‘북핵과 안보 위협’ 응답이 높았으며, 40대와 50대는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각각 30.0%, 32.7%)를 상대적으로 중시함. 60세 이상은 ‘북핵과 안보 위협’(36.5%)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향후 KBS의 통일·북한 관련 보도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가 핵심 비중을 차지하나, 세대에 따라 남북 교류, 사회 통합, 문화적 접점 등 관심 주제가 다양하게 분포함. 이에 따라 보도 기획 시 안보·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하되, 세대별 선호를 반영한 교류·문화·사회 통합 콘텐츠를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I. 여론조사 결과 보도 가이드라인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아래 내용을 **자막 및 멘트인용** 등의 방식으로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 1) 조사대상
- 2) 조사 방법
- 3) 조사 기간
- 4) 표본추출방법
- 5) 표본의 크기
- 6) 표본 오차
- 7) 응답률
- 8) 질문내용
- 9) 조사 의뢰 기관
- 10) 조사 수행 기관
- 11)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